



# 동북아물류중심 항만관리체제 전환 해양수산부,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세계일류 해운물류사업 육성키로

올해부터 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PA) 체제로 전환되고 영향도가 낮은 일부 항만은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주요 항만의 운영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체제로 본격 전환된다. 또 지방청 단위의 해역관리도 광역관리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등으로 동북아 선박금융센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양부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배후부지 및 화물유통기지 관리에서부터 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일부 정부 기능까지 항만공사에 위탁하는 등 항만공사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오는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차질없이 설립하고 울산, 광양 등 주요 항만은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세부여건을 토대로 항만공사 도입시기를 결정케 된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동시 육성은 더욱 가속화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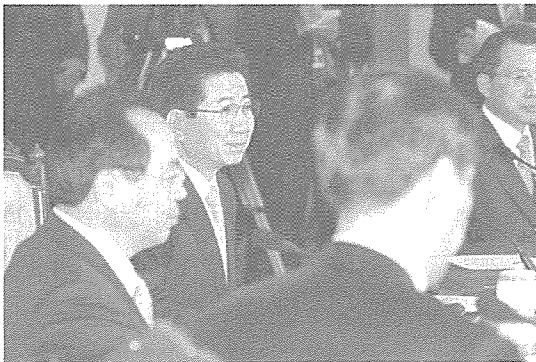
다. 올해 안에 부산신항 1단계 3선석이 조기 준공될 예정이며 부산항 감천부지에는 다국적 물류기업을 입주시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양항은 신규 5선석을 민자로 유치하고 서측 배후도로 및 철도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해운업 분야는 오는 2011년까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선진국 수준의 톤세제를 완비하고 올해 중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 동북아 선박금융센터로의 발전에 초석을 닦는다는 전략이다.

해양부는 WTO/DDA와 FTA 등 올해 예정된 대외 협상에서는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이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조국과 최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박람회 전문가를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국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경우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개막과 지역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세계 일류 해운물류산업 육성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잘 사는 수산업인, 살기 좋은 어촌 실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신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문화 창달 등 6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3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의 해양수산 정책은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운산업의 선진화, 해양자원의 산업화와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항만 및 배후부지 인프라 구축

부산신항의 1단계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북항 일반부두는 신항 개장과 연계해 물류비즈니스, 해양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으로 재개발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감천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입주시켜 본격 가동시키는 한편 선박금융 등 항만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한다.

광양항의 경우 신규 5선석을 민자유치하고 서측 배후도로 및 철도 사업을 12월에 착공한다. 또 올해 안에 다국적기업 3개를 입주시켜 배후부지 10만평을 본격 가동하고 122만평에 이르는 배후부지는 2011년까지 국제종합물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동측 10만평의 조기 공급과 39만평 추가 조성 사업을 오는 4월 착수한다.

항만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은 지방분권과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체제로 개편된다.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배후부지 및 화물유통기지 관리 등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일부 정부 기능까지 항만공사에 위탁하는 등 국가 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항만은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케 된다.

인천항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차질없이 설립하고 울산, 광양 등 주요 항만은 오는 9월 재정자립도 등 세부여건을 토대로 항만공사 도입시기(로드맵)를 결정케 된다.

### ▶ 세계일류의 해운물류사업 육성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등으로 동북아 선박금융센터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박편드를 지난해 10억달러에서 2011년 128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다양한 상품개발, 해외마케팅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계산, 해운업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톤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하고 선박법·국제선박등록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분산된 선박 등록절차를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으로 일원화하는 등 국제선사의 경영여건 향상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관광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산업발전기획단'을 이달 중 구성해 부산항과 제주외항에 대형 관광 크루즈선 전용터미널 건설 사업에 착수한다.

해운업계의 안정적 인력 확보 차원에서는 현재 7명인 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고용을 선장과 기관장 외 모든 선원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통해 외국인 선원과의 선원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해군 예비역을 고용하는 등 세부방안을 수립한다.

###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수계 구간별로 오염물질을 할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하는 유역관리제도인 오염총량관리를 오는 8월 마산만에 시범 실시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육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허용 품목도 14개에서 7개로 축소된다.

무안 갯벌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여수 선소, 포항 영일



만 등 훼손된 해양생태계 서식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해양생물종 서식 및 분포 현황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해 '해양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등 해양생태계 관리를 과학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치 상태에 있는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유형별 등급화,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해 레저관광 수요와 생태적 가치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해수욕장은 사계절 국민 휴양지로 조성한다는 모토 아래 관리상태가 우수한 해수욕장에 시설 및 환경개선자금을 제공해 지자체간 자율 경쟁체제를 조성할 방침이다.

### ▶ 신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문화 창달

지진해일(쓰나미) 등 해양재난 예방을 위한 관측·예보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연안의 해저지질 및 지진분포대 연구와 해양재해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실시간 해양자료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해양관측소 5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제2해양과학기술기(소흑산도) 구축 및 해양관측용 인공위성 탑재체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자원 산업화의 일환으로 오는 5월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건립해 본격적인 연구 및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또 해양생명공학을 집중 육성키 위해 실용화 대상물질 10개를 발굴하고 해양생물자원 정보 DB를 하반기 중 구축한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2월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선박편드에 해외 선사를 유치하는 등 2011년까지 선박금융시장을 128억달러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한 톤세제

를 통해 해외에 등록된 국적선사 선박의 국내 복귀와 외국선사의 국내 유치를 통해 2003년 기준 2680개였던 운항선대 규모를 2007년까지 3200개, 2011년에는 4000개로 확대해 세계 5위의 운항선대 보유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해운과 조선, 화주산업간 동반발전 모델도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제철연료와 유연탄, LNG 등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국적선사 수송을 유도하기 위해 선주와 화주, 조선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장기수송화물의 안정적·경제적인 수송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오는 12월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해운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 여수청과 방제조합, 해안방제협약 체결 여수항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이 2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과 항만시설방제에 관한 해안방제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안 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작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협약 체결로 여수·광양항 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해안방제작업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오염으로 인한 항만운영 지장 초래 및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